기획예산처	보도설명자료	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	배포 후 즉시	배포	2026. 11. 11.(수)

미래대응기금은 법률이 정한 계정별 용도에 맞게 편성하며, 국회의 심의와 통제 하에 엄격히 운용됩니다.

< 보도내용 >

□ 2026.11.11.(수) 서울신문은 「첨단산업·미래세대에 쓴다더니… 점점 '누더기' 되는 미래기금」 제하의 기사에서

○ "국회 심의 과정에서 소방·교육환경 개선 등 당초 계획에 없던 요구가 이어져 '제2의 지역구 민원예산'으로 변질"되고 있으며, "계정 목적과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편성할 수 있는 구조이며, 현금성 복지·지방재정 지원까지 담당"한다고 하면서,

○ "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을 유가증권 매매로 운용해 '빚투' 우려가 있고,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%까지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어 자의적 사용 우려가 있다"고 보도하였습니다.

< 정부입장 >

【 미래대응기금 사업 범위 관련 】

□ 정부는 청년, 성장동력, 지방, 교육·인재 4대 분야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의 과실을 확산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을 미래대응기금에 선정·편성하였습니다.

○ 미래대응기금법(안)은 계정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, 계정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은 기금에 편성될 수 없습니다.

* (예) 지방계정: 지역산업 인프라, 정주여건 개선, 농어촌 지원, 지자체 지원 등

○ 기사에서 언급된 농어촌 기본소득, 지방미래성장지원금, 통합 지방정부 지원 등은 인구 유입과 지역주도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투자로, 지방계정 목적에 부합합니다.

□ 한편, 정부는 지방정부의 소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방재정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,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내용은 예산안 국회심의 과정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.

【 여유자금 운용 관련 】

□ 정부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고,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담 운용기관을 선정하여 여유자금을 위탁 운용할 계획이며, 채권·주식 등 국내외 유망자산에 분산투자하여 국고채 3년물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 달성을 목표로 운용할 예정입니다.

○ 구체적인 운용방식, 자산배분, 목표수익률 등은 미래대응기금법 통과 후 자산운용지침을 신속히 마련하여 정할 계획입니다.

【 국회 의결 없이 최대 30% 변경 등 국회통제 약화 관련 】

□ 미래대응기금은 기금의 성격, 신축적 집행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, 기금 자체 변경 기준을 30%로 설정했습니다.

○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 기금과 금융성·계정성 기금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, 사업지출 규모(45.4조원)보다 재정안정화(국채발행 축소 12.5조원, 여유자금 104.4조원)를 위해 활용하는 비중이 더 크기 때문에 기금 자체변경 요건을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30%로 설정하였습니다.

-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, 신규사업(주요 지출항목) 등 국회 의결 취지에 반하는 사업을 증액*할 수 없습니다.

*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 (…)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.

□ 기본적으로 미래대응기금은 다른 예산 및 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재정법 및 국회법에 따른 통제와 규율을 동일하게 적용받고,

○ 초과세수를 적립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하여 다른 기금에 비해 보다 강화된 사후 통제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.

담당 부서	미래전략기획실 미래대응기금 추진단	책임자 담당자	단 장 박성훈 (044-214-1690) 서기관 박성준 (bbakko0@korea.kr)
	예산실 예산정책과	책임자 담당자	과 장 김정애 (044-214-2330) 서기관 하치승 (hcs017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대체불가 대한민국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